

# 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정 관심사 될 계기

### 민주, 오늘 남원 금지면 하도리 일대 수해피해지역 찾아 복구 지원 이낙연 의원 등 당대표 후보·한병도 의원과 원내 의원단이 동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전북의 수해 피해지역을 찾는다. 이는 피해 규모가 큰 전북지역의 남원과 순창 등 심각한 수해피해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당·정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에 600mm에 가까운 폭우로 인해 발생한 각종 피해 시찰에 대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현장 봉사 활동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과 전복출신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와 원내 의원단 등 50여명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일대에서 복구 작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해복구 현장에서의 활동 역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을 위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현장 봉사 활동이 진행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오는 29일 예

정때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의 행사보다 수해 피해지역의 국민들의 안전과 신속한 복구와 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부분의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피해지역 지원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북의 수해 피해지역 일손 돕기와 현장방문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늘은 수해피해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에 나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불법의료 근절... 의사·보건의료인력 확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 관계자들은 11일 전북도청 앞에서 '전라북도 공공의료 확대! 2020 보건의료노조 투쟁 승리! 100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 "섬진강댐관리단 안이한 행정, 큰 화 불렀다"

### 최영일 도의원, 순창 홍수 피해 관련 관리단 앞에서 1인 시위

순식간에 워낙 많은 비가 내리긴 했지만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 물 관리 당국이 홍수조절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1인 시위가 펼쳐졌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의원은 11일 오전 섬진강댐관리단 앞에서 "장마가 유례없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섬진강댐 저수율과 방류량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함에도 기관이기주의 때문에 인근 지역의 피해가 컸다"고 성토했으며 댐관리단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의원은 "섬진강댐관리단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방류했기 때문"이라며 "홍수 예방보다 물이용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무려 총량 1,800톤의 물을 방류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최대 방류량인 총량 600톤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으로 유례없는 양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



쳐 허술한 댐관리단의 방류조절 실패로 댐 하류 지역이 초토화된 바 있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이한 관리와 변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울분을 토해냈다.

최영일 의원은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넘어서자 댐관리단은 19개 수문을 모두 열어 초당

1,860톤의 물을 하루로 흘려보냈다"면서 "하지만 댐관리단은 댐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침수 피해의 원인을 폭우로 돌려 분분을 터트리려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물욕심을 부린 수자원공사와 댐관리단은 즉시 사죄하고 피해 보상과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불시 방류로 피해를 본 순창 지역뿐만 아니라 댐 하류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누락이 없도록 하고 복구를 위한 지원봉사 배치와 물품 배분 그리고 긴급방역 등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민들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그 책임은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피해상황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1인 시위와 함께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투쟁을 펼쳐나갈 것"은 의지를 천명했다.

/유호상·이영원 기자

## 도의회 교육위, 남원 수해피해지역 긴급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1일 남원시 소재 월낙초등학교를 긴급 방문해 홍수피해에 따른 현장 점검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특히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수해피해 불편사항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수해피해 주요원인과 수해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 문제해결 그리고 조속한 복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교육·행정당국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월낙초를 방문한 김희수(전주6·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이번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의회 교육

위원회에서 교육현장의 수해피해 재발방지와 복구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익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면서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피해 복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식(군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구가 힘들겠지만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강용구(남원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해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마음과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이번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더 이상 교육현장에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섬진강댐 불시 방류로 홍수피해를 본 남원시 금지면사무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의 수해복구 작업에 팔을 걷어 부쳤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남원시 소재 월낙초등학교를 긴급 방문해 홍수피해에 따른 현장점검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 민주 이원택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해 사용기한을 확인하고자 2차 포장을 개봉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증가

### 이용호 의원, '외국인 부동산 증과세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지난 10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증가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증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제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증가를 하는 현실과는 광장히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했다"면서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증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일차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김남국, 김민철, 김수홍, 박영순, 안호영, 이상현, 이수진(비례), 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유호상 기자

